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경련 사업보고서 2006

전경련 사업보고서 2006

ANNUAL REPORT 2006



**전경련 사업보고서 2006**

ANNUAL REPORT 2006



# Content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 ANNUAL REPORT 2006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사진으로 본 2006 주요 활동	· 04
제1장 : 2006년도 경제환경과 사업활동 개요	· 10
제2장 : 부문별 중점사업 내용	
1. 투자동향 파악과 투자어로 발굴 및 해소	· 18
2.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환경 개선	· 20
3. 기업과세 합리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 23
4.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	· 26
5. 핵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29
6. 환경 및 자원·에너지 관련 이슈 대두에 따른 기업의 대응력 강화	· 31
7. 정상외교 참여 및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 34
8. 시장경제이념 창달을 위한 시장경제교육 확대	· 36
9.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경제홍보사업 전개	· 41
10. FTA 추진에 따른 대책 강구	· 44
11.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확산	· 47
12. 선진 노사관계 여건 조성	· 50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54
14. 중국산업연구센터 운영	· 56
15.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사 참여 제고	· 60
16. 회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회원서비스 제고	· 62

# 사진으로 본 2006 주요 활동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 A N N U A L R E P O R T 2 0 0 6



❖ 2006 최고경영자 신춘포럼  
(1.18/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발족회의  
(4.18/롯데호텔)



❖ 제45회 정기총회 (2.17/경제인클럽)



❖ 제1차 위원장단 회의 (4.26/회장단회의실)



❖ 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대회  
(3.21/백범기념관)

❖ 제3차 한중재계회의 (6.27~28/롯데호텔)



# 사진으로 본 2006 주요 활동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 ANNUAL REPORT 2006

❖ 2006 제주 하계포럼 (7.26~29/제주 롯데호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10.18/롯데호텔)



❖ 전경련 창립 45주년 기념 사진전 (8.14/전경련회관 로비)

❖ 제22회 한일재계회의 (11.23/신라호텔)



❖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 (9.19/대한상의회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의 (12.28/청와대)





# 제1장

## 2006년도 경제환경과 사업활동 개요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제1장 2006년도 경제환경과 사업활동 개요



• 제45회 정기총회

2006년 한국경제는 수출에서는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내수는 계속해서 부진하였다. 특히, 수출은 원화 환율 하락,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실현하여 3,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러한 대외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2006년 경제성장률은 4년 만에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4분기를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국면에 진입한 우리 경제는 상반기중 5.7%의 성장을 보였으나 3/4분기에는 4.8%로 둔화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던 민간소비가 2/4분기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투자확대로 하반기 이후에도 건설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부진하였다.

한편, 전년대비 13.3% 증가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도 11.5%나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여 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아직까지 수출편중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여력 확대,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

	2005	2006				
		1/4	2/4	3/4	4/4	연간
GDP성장률	4.0	6.1	5.3	4.8	4.1	5.0
민간소비	3.2	4.8	4.4	4.0	3.8	4.2
설비투자	5.1	6.9	7.4	9.9	5.6	7.4
건설투자	0.4	1.2	△3.9	△0.6	1.0	△0.7
상품수출	9.7	11.6	16.2	13.4	12.0	13.3
상품수입	6.1	11.8	14.3	11.8	8.1	11.5

※자료 : 한국은행, 재정경제부(2006년 4/4분기 및 연간 실적은 추정치)

## \* 2006년 중점사업 추진내용

사업명	사업 추진내용
투자활성화 및 경영환경 개선활동 강화	-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 건의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상법개정 종합 정책건의 - 지방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건의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개선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디자인기본법 제정 건의 - 문화완성보증제도 도입 건의 - 제1차 한일 민간관광협력회의 개최(9.18)
자원·에너지 확보와 환경경영 확산	-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건의 등 에너지 대책 추진 - 산업계 자율 환경보호 실천 - 제품 환경성 보장제 개선,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개선 건의 등 국내 환경규제 개선 건의 - 산업계 자율 환경보호 실천
민간 경제협력 기반 확충	- 제19차 한미재계회의 개최(6.20~21) - 대통령의 자원외교 적극 지원 : 아프리카(3월), 중동·중앙아시아 방문(9월)시 기업인 동행, 정부의 자원외교 적극 지원 - 제3차 한중재계회의 개최(6.27~28) - APEC CEO Summit 한국대표단 파견(11.16~19, 베트남)
시장경제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지원 : 교육부와 차세대 경제 교과서 모형 개발 - 본회 경제교육 인증도서 활용, 교사대상 연수 실시 - 대학생 대상 경제교육 실시 : 대학시장경제강좌('06 2학기 : 16개 대학 2,200여명) - CEO 특강 개최(서울교대, 강원대, 명지대, 전남대) - 오피니언 리더 대상 경제교육 실시 : 사법연수생, 국회 신임행정 사무관, 경찰관 등 - 방송작가 베트남 산업시찰(12.3~8)
FTA관련 산업계 대책 수립	- FTA 추진에 대한 산업계 의견 건의 - 한미 FTA 협상 관련 업종별 대응전략 마련 및 홍보활동 강화 • 산자부 및 경제단체 중심 대책반 가동(4회) • 본회 교육프로그램에 한미 FTA 과정 추가, 전화컨설팅 실시 • 한미 FTA 홍보책자 배포 등 -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분야 애로사항 건의 -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애로사항 건의
기업윤리경영의 확산	- 기업윤리위원회 및 기업윤리학교 개최 -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집 발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전달식 - CEO 봉사활동 시행 -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및 Newsletter 발간
선진노사관계 여건 조성	- 산업안전 관련 제도개선 과제 건의 -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과 관련된 정책건의 -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 입법대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핵심부품소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소재 기술로드맵 작성 - 대기업퇴직 기술인력의 중소 부품소재기업 활용 및 공동협력 사업 추진 -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10.18, 본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주관) - 경영자문봉사단 운영('06년, 총 380개 기업에 1,091건 경영자문)



### ■ 핵심 사업과제 추진

2006년 본회는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해 성장동력 확충, 시장경제 창달, 윤리·투명·상생경영 확산이라는 세 가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핵심 사업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핵심 사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특기할 만한 일은 위원회 활동이 강화되고 위원장단 회의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위원장단 회의는 본회 활동에 대한 회원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기업계의 의견을 정책당국에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 강화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 • 투자활성화 및 경영환경 개선활동 강화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 및 적대적 M&A 방어관련 제도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당초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정부안이 마련되었고, 상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지속적인 정책건의로 인해 법무부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심의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였고, 수도권 규제완화 건의를 통해 LG전자, 한미약품 등 4개사의 투자애로가 해소되었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발굴한 총 82건의 투자애로사항 중 수도권 공장증설의 부분적 허용 등 27건이 반영되었다.

#### •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기본법 제정을 건의하였고,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문화후원시스템인 천사관람제를 시행하고 문화완성보증제도 도입을 건의하였다. 또한 본회는 일본 경단련과 공동으로 한일 민간관광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간 관광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 자원·에너지 확보와 환경경영 확산

에너지 등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서머타임제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산업계 자율의 환경경영 확산을 위해 그린 마케팅 특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중소기업의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해외 환경규제 대응전략 설명회와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심포지엄 등

을 개최하였다. 국내 환경규제 개선대책으로 폐기물 부담금 요율인상 억제, 자원순환법의 사전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 • 민간 경제협력 기반 확충

본회는 한미세계회의, 한중세계회의, 한일세계회의 등을 개최하여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 29개 양자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외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회원사의 글로벌경영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총리의 중동·중앙아시아 순방, APEC CEO Summit 한국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정부의 자원외교 및 통상외교 활동도 적극 지원하였다.

#### • 시장경제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시장경제교육 확대와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해 본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델을 개발하였고, 본회 경제교육 인증도서를 활용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주요 39개 대학에서 시장경제교육 강좌가 운영되었으며, 회원사 CEO가 직접 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의하는 CEO 특강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생, 국회 신임행정사무관, 공군장성진급 예정자, 경찰공무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과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 • FTA관련 산업계 대책 수립

한미 FTA 협상지원을 위해 본회와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한미 FTA 과정을 추가하였고, 경제단체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한미 FTA 추진에 따른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주요 업종단체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 대책 마련과 협상전략 제시 등을 통해 우리측 협상안에 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 • 기업윤리경영 및 사회공헌의 확산

기업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집 발간을 통해 윤리경영을 도입·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 전략



●●●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반영도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2006년 주요 정책건의 반영결과

사업명	건의처(건의일)	반영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건의	공정위(2.9)	•공적자금 투입기업 출총제 적용제외 등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 단체소송 적격단체 확대제지	재경부(2.20)	•소비자단체소송의 적격단체 확대 저지 (1,133개 단체 → 100여개 단체로 축소)
상법개정 특위안 중 기업규제요소 배제 건의	상법개정특별위 (2.20)	•이중대표소송, 종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소수주주 반대제안권 저지
수도권 투자활성화 등 82건	산자부(2.27)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선 등 27건 반영
지주회사제도 개선 건의	공정위 (3.3)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 완화 •손회사 취득 제한 완화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
증권거래법 개정 건의	재경부 국회재경위 (4.5)	•개별임원 보수를 공시하는 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찬성하도록 하는 지침 삭제 •개별 임원 보수 공시 지침 삭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개선 등 세제개편종합건의 77건	재경부, 행자부(5.8)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8건 반영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 및 순환출자 규제 도입 반대	공정위 재경부 산자부 (5.12)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적용대상 축소 •출자한도를 40%로 상향 조정 •순환출자 규제 도입 철회
정책금리 현 수준 유지, 추경편성 등 10건	재경부(6.5)	•정책금리 유지 등 3건 반영
물류정책기본법 제정	건교부(6.30)	•8개 건의사항 중 5개 과제 반영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환경부 등(7.12)	•플라스틱, 기저귀 폐기물부담금 요율 인하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저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 (9.18)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철회
이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 관련 건의	법무부 재경부 산자부 국회법사위 (10.4)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주총의 IT화, 주총 결의요건 강화 등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중 •경영권방어차원의 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도입, 자사주처분규정 강화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중

과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기업윤리학교 개최를 통해 우수 윤리경영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등 기업윤리경영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CEO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근한 기업인상 정립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사회공헌 Newsletter를 발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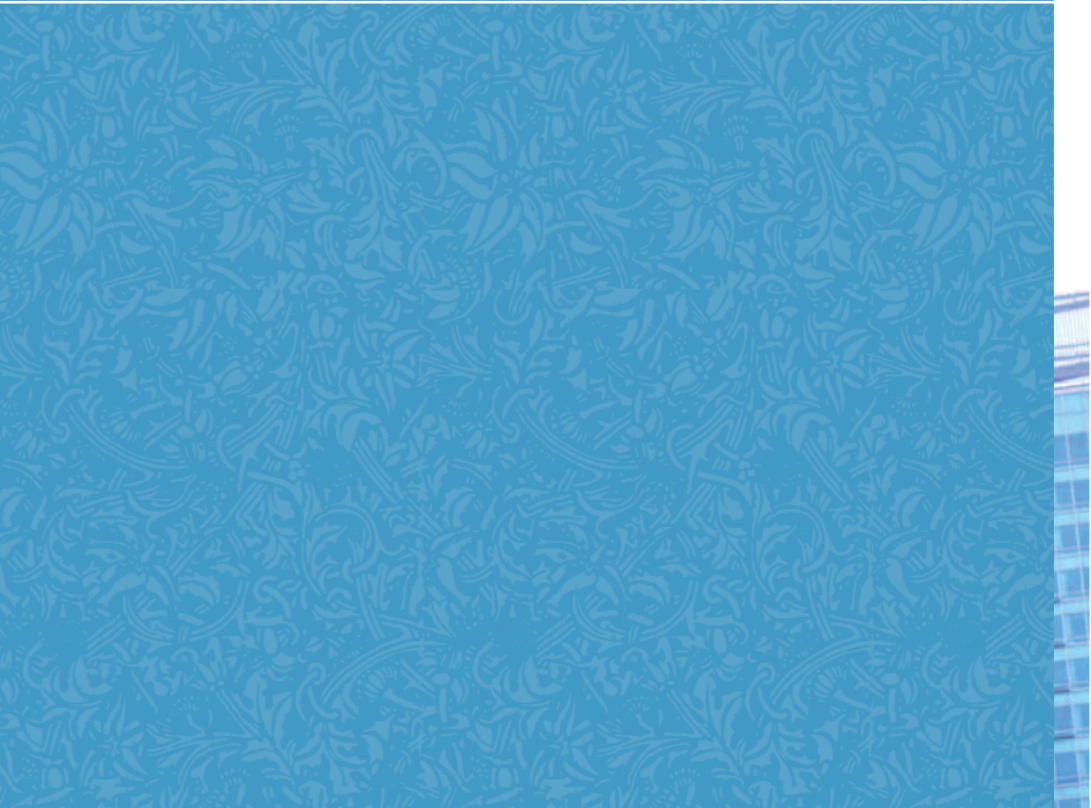
• 선진 노사관계 여건 조성 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경제계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경제단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정부·국회를 대상으로 활발한 정책건의 활동을 하였다.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와 불합리한 기업규제의 완화를 위해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협력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자문봉사단을 운영하고 대기업 퇴직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핵심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금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였다.

•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본회는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회원의 참여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국회나 정부 등 관련 정책당국의 최고책임자 등을 위원회에 초청하여 핵심 현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고, 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제2장

## 부문별 중점사업 내용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제2장 부문별 중점사업 내용

## 1 투자동향 파악과 투자애로 발굴 및 해소

우리 기업의 투자동향과 투자 애로요인을 조사하고 경제여건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노력했다.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월에는 2005년 투자집행 실적과 2006년 투자계획을, 8월에는 2006년 상반기 투자집행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각각 조사했다.

### ■ 신사업 진출과 기술개발을 위한 공격적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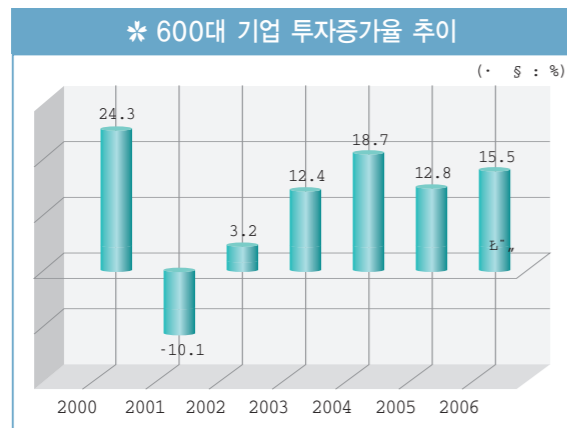
8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중 우리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과 기술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600대 기업의 투자계획은 전년보다 15.5% 증가한 76조 6,44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증가율은 13.5%로 평균치에 못 미쳤으나 전력·가스 등 비제조업의 투자증가율이 18.4%로 전체 투자를 견인하였다. 신제품 생산, 연구개발 투자 등 전략적 투자가 각각 45.7%, 29.0%로 큰 폭 증가했으나 기존시설 확장과 유지 등 대체투자는 8.7%, 9.5%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환경과 관련해서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경제변수가 투자·매출 등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생각하는 정부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업경영환경 조사를 7월 및 12월에 실시하였다.

12월 500대 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업경기 전망은 2006년과 비슷할 것으로 본 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투자확대를 계획한 기업은 과반수를 넘어서서 투자부진에도 불구하고 투자마인드는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2000~2005년은 실적치

## \* 산업별 연간 투자계획

(단위 : 증가율, %)

	전 산업				합 계
	제조업		비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2006년(계획)	17.8	13.3	13.5	18.4	15.5
2005년(실적)	△7.7	18.5	16.6	7.4	12.8
구성비('06년)	2.7	54.5	57.2	42.8	100.0

### ■ 기업투자 애로사항 발굴과 해소



기업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본회는 기업투자 애로사항 발굴과 이의 해소에도 노력하였다. 2005년도에 해결되지 않은 사항과 연초에 조사된 투자 애로사항을 토대로 산자부 등 주요 경제부처와 2회에 걸쳐 투자애로 점검회의를 통해 본회가 발굴한 82건의 기업투자 애로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의 수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내용은 2월 민관투자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그 결과 27건은 수용, 9건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되었다.

9월 민관투자협의회에서는 본회가 하반기 시설투자 동향을 설명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규제적 상법개정 반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을 제시하였다.

출총제, 수도권 규제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접촉도 강화하였다. 3월에는 열린우리당, 10월에는 한나라당의 당대표, 정책위 의장 등 고위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 회장, 주요 기업 대표 등이 경제활성화와 투자확대를 위해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과감한 규제 철폐를 촉구하였다.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방안도 마련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환경과 지원정책, 투자유치 활동과 애로요인을 종합 정리하고 지역별 투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지방투자 활성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 연초부터 제기된 법무부의 상법개정 작업에 대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부합하는 개정안이 도출되는 데 노력하였다.



## 2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영환경 개선

2006년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해로서 하반기부터 새로운 대기업집단 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선진화 T/F가 출범,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조건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였다. 2006년은 이러한 향후 대기업정책의 방향 결정에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둔 한 해였다. 또한 연초부터 제기된 법무부의 상법개정 작업에 대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부합하는 개정안이 도출되는 데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및 집단소송 확대방안 저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증설이 시급한 주요 회원사의 애로 해소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 ■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개선 건의

본회는 시장선진화 T/F에 재계 대표로 참여(7~11월, 총 10차)하여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기업정책위원회 및 기업정책자문위원회, 기업정책 임원회의·실무회의 등을 통해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

이러한 본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지난 11월 15일 출총제 적용대상 축소,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 상향 조정 등 출총제 완화 방침과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정부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또한 본회는 수시 정책건의를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절차 개선(내부거래위원회 의결을 이사회 의결로 간주),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 확대(SOC 법인 결합시)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시 출자총액 예외인정을 건의하여, 회원사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였다.

### ■ 상법개정에 경제계 의견 적극 제시

상법개정 작업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과 공청회시 의견개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이종대표소송, 집행임원제도 등 기업규제적 성격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본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의 도입과 연내 입법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초 강제조항이었던 집행임원제도, 역이종대표소송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과정에서 저지하였고 이종대표소송, 회사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쟁점 사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부각시켜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등 법무부가 당초 목표하였던 연내 입법을 저지하였다.

한편, 본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관하에 '경영판단의 원칙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영판단 원칙의 정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였다.

#### \* 공정거래 관련 주요 사업성과(정부안)

구 분	항 목	반 영 내 용
출총제 개선	적용대상	• 자산총액 '6조 원~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
	출자한도	•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를 '25%~40%'로 상향 조정
	순환출자 규제	•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적용 제외	•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적용 제외
지주회사제도 개선	부채비율	•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 완화(100%~200%)
	손회사 취득	• 손회사 취득 제한 완화(사업관련성 폐지)
	행위제한 규정 유예	• 행위제한 규정 유예사유 확대(합병 등 포함)
	자회사 지분율 요건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상장사 30%~20%)
	증손회사 허용	• 증손회사의 제한적 허용(100% 출자시 등)
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률 확대	

#### \* 상법개정 관련 주요 사업성과

구 분	주 요 내 용
법무부 상법개정특위 활동 결과	• 역이종대표소송, 종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소수주주 반대제안권 저지 • 이사와 집행임원 겸직가능, 의결권제한주식 등 주식 종류 확대, 법정준비금·배당제도 개정, 이사책임감경 규정 도입
상법개정안	• 이종대표소송, 집행임원 등 규제적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을 통해 연내 입법을 저지 • 이종대표소송, 회사기회 이용금지, 집행임원제도 등 지배구조 부문 쟁점사항의 법무부 입장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개최 유도

●●● 기업의 투자심리를 북돋우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각종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확충할 것을 주장하였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적극 건의

수도권 규제 등 핵심 규제 및 기타 분야별 규제완화와 관련된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국회 차원에서 운영되었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주제발표 및 對국회 건의를 통해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였다. 기타 수시 정책건의를 통해 경영활성화 여건 조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의 도입을 저지하였다.

그 결과 LG전자(오산),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팬택(김포) 등 성장관리지역 4개 대기업의 증설 허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분야별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경제 5단체는 분기별 규제개혁 과제 공동건의를 통해 상반기에 총 94건을 건의하여 그 중 총 34건이 수용되었으며, 하반기에 건의한 120개 과제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다.

기타 관련 부처 및 국회 상임위에 대한 정책건의를 통해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완화하여 회원사의 애로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국민연금의결권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별 임원보수 공시 규정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을 유도하였다.

각종 기업소송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다수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저지하였다. 특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에 대응하여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선제적으로 저지하였다. 또한 국회 재경위에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대상의 축소조정을 건의하였으며, 당초안(1,133개 적격단체)에 비해 상당 폭으로 축소(100여개 단체)된 법안의 통과를 유도하였다.



3 기업과세 합리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본회는 조세측면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상반기에는 회원사의 세제개선 의견을 수렴, 전문가 및 업계 회의 등을 거쳐 2006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마련, 총 77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동 건의서는 투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충, 조세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 조세의 국제적 조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 투자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주력

세제개편 종합건의서에서 본회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북돋우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첨단설비 등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경상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세부담 경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국세환급가산금

**\* 세제건의 주요 정책반영 실적**

구 분	건의내용	정책반영 내용
법인세법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익금불산입 비율 단계적 상향 조정
조특법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2007년 말까지 일몰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장	2009년 말까지 일몰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 연장	2009년 말까지 일몰 연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2009년 말까지 일몰 연장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2009년 말까지 일몰 연장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2009년 말까지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사업장 과세 개념 수정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등록 대신 사업자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도입
지방세법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2009년 말까지 감면 연장

조정,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회원사의 납세편의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의 증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였다. 주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상환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기부금영수증 지출시 증빙수취 의무 완화,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농특세 환급방법 개선, 복수의 총괄납부사업장 허용, 세금계산서 선발행요건 완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요건 완화, 거래시기(공급시기 의제) 규정 보완, 법인세할 주민세 일괄납부 및 가산세 제도 폐지, 분납대상 범위 확대, 산업단지내 건축물 건축시 면적조항 확대 등이다.

**■ 대정부 및 대국회 정책간담회를 통한 정책반영 촉구**

본회는 건의사항의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정책간담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당국에 직접 전달하여 정책담당자가 기업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9월 이후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본회 건의 중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과 정부안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건의서를 마련하여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 재정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기업 관심사항의 정책반영을 재차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입법 전문위원 등에도 의견을 전달하여 입법과정에서 본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2006년 세법개정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 등을 이유로 소폭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회 건의내용 중 상당부분이 정책에 반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세법개정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 사업장 과세 개념 수정,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이다.

●●●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 4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

2004년 6월, 전경련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의 취지로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이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2005년 7~8월, 정부는 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인 의견과 기업도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회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6개 기업도시 개발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 ■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순조로운 추진

2006년말 현재 태안(관광레저형), 무안(산업교역형), 충주(지식기반형), 원주(지식기반형) 등 4개 지역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무주(관광레저형), 영암·해남(관광레저형) 등 나머지 2개 지역도 2007년 상반기 중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중인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총 개발면적은 2,086만평에 이르며, 전체 투자규모는 기반조성공사비 기준으로 5조 1,29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본회는 영암·해남 지역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환기업, 롯데건설, 한화국토개발,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구성된 '전경련·한국관광공사 기업도시 합동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사

업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을 완료하였다. 용역사업은 본 합동기획단의 주도하에 제일엔지니어링을 비롯하여 삼일회계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삼우디앤엠, 선진 등으로 구성된 연구용역단이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합동기획단 및 연구용역단의 연구용역 과정을 매주 점검하였으며, 합동기획단 참여사의 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개발계획의 방향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계획 용역단 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그룹들과의 정례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본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문화부 장관, 전남지사, 참여사 대표, 기업도시 민간위원 등 30여명을 초청하여 서남해안 기업도시 추진계획 보고회(3.3)와 추진상황 중간보고회(6.29)를 각각 개최함으로써 기업도시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 ■ 기업도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점들과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기업도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기업도시지원 태스크포스트팀을 두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업도시 건설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폐지,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초기자금 확보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초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낙후지역에 건설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는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과 기업의 적극적 개발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도시 관련 부처의 지원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본회는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개발계획 (2006년 12월 기준)

지 역	개발면적	기반조성비	비 고
무안	526만평	1조 2,040억 원	1단계 개발계획만 반영
충주	213만평	4,577억 원	
원주	162만평	5,000억 원	
무주	243만평	5,500억 원	
태안	442만평	1조 1,177억 원	
영암·해남	500만평	1조 3,000억 원	전경련 컨소시엄 지역만 반영
합계	2,086만평	5조 1,294억 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종 전	개 선 안	관련 규정
출중제 적용 제외	• 기반시설 설치비에 한하여 제외	• 출자금 전체를 적용 제외	기업도시법 제32조
초기자금 확보 부담완화	• 도시조성비의 20% 확보(자기자본 및 투자자금) • 현물 출자시 공시가의 50% 인정	• 도시조성비의 10% 확보(자기자본) • 현물출자시 공시가의 100% 인정	기업도시법 제10조
수자원보호 구역 해제외제	• 관광레저형에 한해 제외	• 모든 유형의 기업도시로 확대	기업도시법 제11조
농지전용 허가 의제시점	•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 처리	•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 처리	기업도시법 제11조
농어진흥지역 의제 처리	• 인허가의 의제 사항 조항 없음	•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 처리 조항 신설	기업도시법 제13조
전담기업 출자자격 완화	• 투자적정등급(BBB) 이상으로 규정	• 최초 자본금은 BBB 이상 • BBB 미만 기업도 총 자본금 20%내 출자허용 • 외국기관의 신용평가 결과도 인정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14조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 기업도시법상 감면규정이 있으나 농지법 시행령에 미반영	•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50%(공공 기부채납 시설은 100%) 반영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이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에서 기업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폐수처리장, 용수공급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준과 규모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주여건 확보 등 자생적 수요창출 방안 강구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자생적 수요창출의 원천인 정주민구가 조속히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주 인센티브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초·중등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이 단기 간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도시내 기반시설 등 물적 토대와 함께 조속한 인구유입을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또는 일정기간 유예), 외국의 우수한 초·중등교육기관 및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자생적 수요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낙후 지역 입지 특성상 초기의 도시기반 조성단계에서 실질적 인구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회는 2007년중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5 핵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 하에 초고속성장을 이룩해 온 우리 경제는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 반영

서비스업 관련업계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사의 애로사항과 아시아 의료관광의 성공 사례 및 시사점, 차이나타운 활성화 방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과제 등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한나라당 재정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 전반에 관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라는 3대 부문 159개 과제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12.15). 특히, 본회가 중점적으로 건의해 온 관광호텔부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광호텔의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및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골프장 시설제한 완화, 중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개선,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비인정,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의료비자 도입,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채용절차 간소화 등 10여개 과제가 반영되었다.

또한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산업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일본 경단련 관광위원회와 한·일 민간관광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9.18). 이를 통해 양국은 동북아시아 관광존 형성, 엔터테인먼트와 관광의 연계, 관광인재 육성, 서머타임제 실시 등의 5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 소외계층을 위한 천사관람제 시행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본회가 주장해





●●●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 및 자원·에너지 관련 이슈에 따른 기업의 대응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온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설립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공연장의 잔여좌석을 대기업이 저렴하게 구입하여 문화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천사관람제 시행으로 문화상품 이용 활성화는 물론 향후 10년간 소외계층 어린이 3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문화산업포럼 개최를 통해 아시아의 문화산업 리더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사업 전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2006년 서비스산업 관련 건의요지 및 반영내용**

건의명	분회 건의요지	정부 발표내용
중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개선	•수시방문관광객, 여행사가이드 등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등 중국인 관광객 입국절차에 대한 우대조치	•중국 전문여행사 가이드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중국 단체 관광객 규모제한 완화,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차이나타운 활성화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채용절차 간소화, 금융거래 불편 해소	•인천 차이나타운을 지역특구로 지정(특구내 중국인 요리사 체류기간, 출입국절차 간소화) •금융기관의 외국인 실명프로그램 설치 확대 (은행연합회 협조)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의료관광비자제도 도입 등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범위 확대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G비자 활성화 (치료목적의 외국인관광객 비자발급절차 개선)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생활화 환경조성	•영어초등교육 확대,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영어공용화 특구 운영	•제주도에 (가칭) 영어 전용타운 건설 •외국교육기관 설립 활성화 강구
문화상품의 접대비 한도 예외 인정	•기업의 문화상품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기업의 문화상품 구입시 접대비 한도에서 예외 인정	•기업의 문화비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접대비의 5%)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
관광호텔부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허용	•관광호텔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분리과세 허용(현행 0.6~1.6% 누진과세)	•관광호텔, 물류업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단일세율 적용(0.6~1.6%⇒0.8%)
관광호텔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대상 편입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대상에 관광숙박업 포함(현행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2010년까지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기한 연장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산업인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광호텔 외국인력 고용 허용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분야(외국어, 3D직종)에 한해 관광호텔 등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	•관광호텔의 외국인력 수요 및 공급실태 파악 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처리
골프장시설 관련제도 개선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가족단위 관광수요에 대응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구역과 숙박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 완화(체육시설법 개정)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브랜드 개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 개발 및 체인화 추진('07년중 10개소)

**6 환경 및 자원·에너지 관련 이슈 대두에 따른 기업의 대응력 강화**

2006년 봄의 심각한 황사, 평년의 2배 이상을 기록한 장마폭우, 미국의 폭염, 인도네시아의 지진, 중국 남부지역의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히 제기 되었으며, 또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본회는 이와 같은 환경 및 자원·에너지 관련 이슈에 따른 기업의 대응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 황사방지를 위한 한·중 양국간 협력 증진**

황사가 국내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황사관련 제품(황사마스크, 황사에 좋은 음료) 개발사례 공유 등 환경위원회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황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한중우호 녹색장성' 건설사업 등 황사·사막화 방지사업에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간 협력을 돈독히 하고 시장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황사·사막화 방지 식림사업을 CDM(청정개발체제)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기업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하고자 CEO 지속가능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사회적 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대책 세미나 개최, 환경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관학 공동 세미나 개최, 친환경경영 활성화 대책 및 대·중소기업간 그린파트너십 선진사례 공유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국내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국제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를 운영하였으며, 무역관련 환경규제가 우리 경제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

※ 2006년 환경 및 자원·에너지 현안 대응사업 추진현황

구 분	주요 활동내용
자원·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 건의(1월)</li> <li>- 국제원자재 가격 및 자원개발 동향과 과제(3월)</li> <li>- 주요 기업의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추진사례 보고서(5월)</li> <li>-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건의(7월)</li> <li>- 기업의 하절기 에너지 절약 실태조사 및 CEO Report 발간(8월)</li> <li>- 서머타임제 기대효과 및 도입과제 CEO Report 발간(11월)</li> </ul>
현안 이슈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과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발간(3월)</li> <li>- 에너지와 기후변화 발간(3월)</li> <li>-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산업계 의견(2월)</li> <li>-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산업계 의견(4월)</li> <li>- 자동차 등의 재활용 촉진법 의원입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4월)</li> <li>-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4월)</li> <li>-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대책(정책건의 3회, 대책회의 7회)</li> <li>- 우리나라에 미치는 황사 영향 최소화 방안(안) Issue Paper 발간(6월)</li> <li>-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안)” 검토 보고(7월)</li> <li>-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검토 의견(9월)</li> <li>- 제4회 CEO 지속가능경영 아카데미(9월)</li> <li>- 환경기술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산관학 공동 세미나(9월)</li> <li>- 한명숙 총리-KBCSD 회원간담회(10월)</li> <li>- 황사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세미나(11월)</li> <li>- 음식물류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세미나(11월)</li> </ul>
선진환경규제 정보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 환경정보의 수집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 :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li> <li>• 대상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자재, 섬유 등</li> </ul> </li> <li>- 온라인 무역환경정보 검색시스템(TEN, <a href="http://www.ten-info.com">http://www.ten-info.com</a>) 개발</li> <li>- 월간 해외환경규제 동향 발간(1월~12월, 12회) 선진 환경규제 분석평가단 운영 및 대응방안 강구</li> <li>- 선진환경규제 분석평가단 연구회 운영(3회, 3/30, 8/30,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규제, 표준, 협약 등에 대한 최신정보 공유, 업계가 필요한 기술수요 분석 및 규제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li> <li>• 정부, 업계, 학계 등 전문가 60명으로 구성</li> </ul> </li> <li>- 중소기업 대응방안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체계 구축</li> <li>- 중소기업의 해외환경규제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5월)</li> </ul>

향을 연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환경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선진 환경규제분석평가단’을 운영하며 EU 및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과 연계된 환경규제 및 환경협약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월보를 발간하였다.

이밖에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관련 연구 및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2006년에는 다양한 환경규제의 신·증설이 추진되어 기업의 경영난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본회는 경제 4단체 및 주요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환경규제가 법 취지에 부응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고유가 상황 극복을 위해 국제원자재 가격 및 자원개발 동향과 과제 보고서 발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건의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서머타임제 도입,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절약 운동 확대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추진하였다.

●●● 정상외교와 연계한 민간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자원부국들의 석유 및 자원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와 통상증진을 위한 진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 7 정상외교 참여 및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본회는 정상외교와 연계한 민간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자원부국들의 석유 및 자원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통상증진을 위한 진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지역경제협의체 참가를 통해 우리 경제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국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주요국 기업들과 사업기회를 발굴하였다.

### ■ 정상외교 참여를 통한 민간 통상협력 활동 추진

본회는 2006년에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연합, 핀란드, 그리스, 루마니아 등에 정상외교와 연계한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석유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인 알제리, 나이지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및 외교의 중심국인 이집트에 민간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참여, 건설과 플랜트 사업에의 진출 등 자원확보와 시장개척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9월에는 핀란드와 그리스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지닌 IT,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12월에는 호주를 방문하여 한·호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고 생명공학, 금융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호주 FTA의 조기체결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였다.

### ■ 주요국들과의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민간 경제협력 채널 운영

본회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양자간 세계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비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실질적인 산업협력을 모색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다.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9회 한미세계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을 위한 금융제도 개혁,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등 양국 경제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회 한중세계회의에서는 양국간 투자, 기술협력 확대와 함께 철강·석유화학·에너지 등 주요 산업별 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5월에는 중국 동북3성에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현지 정부에 전달하였다.

11월 서울에서 제22회 한일세계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FTA의 조속한 체결, BRICs 국가에의 진출 시 양국간 전략적 제휴방안, 인적·문화적 교류의 획기적 증진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한국측은 한일 청소년교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일본측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제31회 한·대만 경험위 합동회의(11월, 타이페이)를 통해 산업부문별, 기업간 협력과제 도출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회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 10월에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향후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할 3국간 투자, 교역증진을 위한 방안 및 산업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측 주도로 3국 정부와 민간채널간 협력방안을 개진하는 등 동북아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4차에 걸친 ABAC(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참가를 통해 APEC 정상들에 대한 권고안에 한국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9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AEBF(ASEM 기업인자문위원회)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여 아시아와 유럽간 무역투자자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또한 3월에는 국제조세 문제를 주제로 BIAC(OECD 기업인자문위원회) Business Day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8 시장경제이념 창달을 위한 시장경제교육 확대

본회는 청소년, 대학생, 교사 및 오피니언 리더 등 다양한 계층으로 시장경제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장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학교 시장경제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장경제이념 전파를 위한 부문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 ■ 교육부·재경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경제교육 강화



본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2.15)함으로써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시장경제교육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이야기 형식의 실생활 중심 소재들로 체험학습을 도입한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모델을 공동 제작하였으며, 이를 차기 교과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으로 본회

는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체험경제 교습법'을 도입하여 동계 및 하계방학동안 총 220명의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중등교사 교습법 연수를 시행하였다. 예비교원들에게 '재미있는 경제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 교육대·사범대생에게 '체험경제 교습법' 시범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체험경제 교습법 교재 개발을 위해 미국 NCEE 경제교육 교재를 전면 개정·발간하였다.

또한 본회는 재정경제부와 경제교육협의회를 결성(경제교육 관련 민·관기관 참여)하여 중학교 창의재량 활동시간에 활용하기 위한 경제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06년 착수사업)하였으며, 일반인 대상의 경제교육 표준교재 개발·보급('07년 착수사업)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4.4). 중학교 창의재량 활동시간에 활용하기 위한 '경제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였으며('07년 1월중 발간), 정규경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되,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자용 수업자료를 각각 개발하였다.

\* 2006년 전경련 시장경제교육사업 개관

구 분	제 목	회수/학급	인원(명)
청소년	청소년영어경제캠프	4회	480
	JA 프로그램	1,145학급	38,701
	신나는 CEO 세상	35학급	1,400
	청소년 산업현장체험	43학급	1,720
	경제기자교실	-	183
	어린이경제나라	31학급	1,240
대학생	대학시장경제강좌	39개 강좌	4,757
	CEO 특강	4회	3,700
	총학생회 간부 경제교육	1회	38
	대학신문기자 경제교육	1회	18
	전국대학생 Debate Competition	예선, 본선	68
	영리더스캠프	2회	270
	하이테크 아카데미	2회	120
	21세기 청년아카데미	2회	120
	미래엘리트양성과정	2회	270
	시장경제체험단	2회	41
일반인/ 오피니언 리더	고위공직자/민간경제계 합동세미나	1회	110
	사법연수생 경제강좌	1회	60
	국회신임행정사무관 경제교육	1회	19
	경찰관 경제교육	1회	35
	공군 장성진급예정자 경제교육	1회	15
	방송작가 베트남산업시찰	1회	30
	열린사회아카데미	2회	110
교사 교육	NCEE 경제교육 교습법 중등교사 연수	2회	220
	중·고교 사회과교사 중국산업시찰	2회	200
	교사 논술캠프	1회	200
	교사이코데미아	4회	160
	플러스 이코데미아	1회	76
	경제와 문화체험	2회	390
교과서 모델/ 교재발간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모델 개발(교육인적자원부 MOU사업)	-	-
	교육대·사범대 예비교원 '체험경제교습법' 강좌 개설(교육인적자원부 MOU사업)	-	-
	중학교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재정경제부 MOU사업)	-	-
	『실용경제학』(NCEE고등학교 경제교육 교사용지도서) 전면 개정판 발간	-	-
	『즐겁게 배우는 체험경제』(NCEE 중학교 경제교육 교사용 지도서) 전면 개정판 발간	-	-
온라인 경제교육/ 출판문화	체험경제 중학교 인정도서 전면 개정판 발간	-	-
	'시장경제' 사이트 운영	-	-
	시장경제대상 시상	1회	223종 출품 (10편 시상)
	청소년 온라인 시장경제글쓰기대회	2회	564편 응모 (13편 시상)



### ■ 여론주도층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28개 경제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5만 4,792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여론주도층에 대한 새로운 시장경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사법연수생 경제강좌(7.3~14)', '국회신임행정사무관 경제교육(10.24~26)', '고위공직자/민간경제계 합동세미나(9.21~9.22)', '경찰관 경제교육', '방송작가 베트남산업시찰(12.3~8)'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등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경제강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공군 장성진급예정자 경제교육(11.20~24)'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학생들의 경제교육에 영향력이 큰 중·고교 교사에 대해서도 경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미국경제교육협회(NCEE)의 체험식 경제교육 교습법 교육(1월, 8월)과 교사사이코데미아(1월, 8월)를 시행하였으며,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중·고교 사회과교사에 대한 중국산업시찰(1월, 8월)과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경제와 문화체험(1월, 8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올바른 논술교육을 위해 교사논술캠프(11.24~26)를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새로이 개최하는 등 일선 학교에서 올바른 시장경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대학시장경제강좌, 캠퍼스 CEO특강, 영리더스캠프(1월, 7월)·미래엘리트양성과정 등 대학생 경제교육을 시행하고 후속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내 긍정적인 기업상 확립과 시장경제 학습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전국의 주요 39개 대학에 시장경제강좌

를 개설하였다. CEO 출강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대학(강원대 1,400명, 전남대 1,300명)에서 대규모 시장경제특강을 개최하였고, 이를 한국경제신문에 지상중계함으로써 해당 기업과 경제계 이미지가 제고되는 데 기여하였다. 총학생회 간부(7.3~7) 및 대학신문기자(10.29~11.1) 등 대학내 여론주도 학생층에 대한 중국산업시찰을 시행하여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은 NCEE 교재를 활용한 '청소년 영어경제캠프(1월, 8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전체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초등학교 경제교육 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동안 JA Korea, 어린이경제신문, 아이빛연구소 등 경제교육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프로그램을 온수초, 신사초, 양지초, 수지초 등 4개 초등학교를 '경제교육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체험학습 위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 ■ 시장경제이념의 확산을 위한 노력 경주

인터넷 논술경진대회, Debate Competition, 출판방송매체장려사업을 통해 시장경제이념이 확산되는 데 노력하였다. '청소년 온라인 시장경제글쓰기대회(1회 : 한미 FTA, 2회 : 고용유연성)'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미 FTA, 비정규직 등 고용유연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 전국 대학생 Debate Competition(11.30, 34개팀)을 통해 대학 내에서 건전한 토론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17회 시장경제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시장경제의 창달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출판물의 저작과 언론활동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였다. 2006년도 시장경제대상에 출판물 196종, 방송 프로그램 17종, 신문 기획시리즈 10종 등 총 223종이 출품되었으며, 출판물, 방송 프로그램, 신문 기획시리즈 등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대상 1편과 우수상 2편 등 총 9개 작품을 시상하였다.



경희대, 서강대, 배재대, 한국교총 등과 공동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경제원리와 친시장적 경제정책,



※ 제17회 시장경제대상 수상작

	구 분	도서명/프로그램명/기획시리즈명	저자/제작진/집필진	언론/출판사
출판물	대 상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도서출판 해남
	우수상	신국부론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좌승희 박세일	굿인포메이션 21세기북스
신문 기획시리즈	대 상	실록 수출 40년	오창규	문화일보
	우수상	기업 상속세 딜레마	조일훈	한국경제
		신성장 국가 2단 도약의 비결을 찾는다	이규진	서울경제
	세계 교과서 속의 한국경제	홍성일	세계일보	
방송 프로그램	대 상	UBC 특별기획 글로벌 TOP 5, 도전과 과제	김영곤	UBC
	우수상	신화창조 광복 60년 SBS 스페셜 메이드 인 코리아	김영목 신용환	KBS SBS

학교경제교육이 확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국교총과는 전략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 및 초·중·고 교사의 경제교육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회는 한국교총에 청소년과 초·중·고 교사에 대한 인식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학교경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공동세미나(12.1)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경제교육과 여론조성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기업 및 기업오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한국갤럽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10.10~26), 일반인의 대기업 호감도와 기업오너(소유주)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전년대비 0.8%p 증가(57.2% ⇒ 58.0%, 40.3% ⇒ 41.1%)하였으며, 기업인의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도 전년대비 13.2%p 증가(31.6% ⇒ 44.8%)하였다.

9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경제홍보사업 전개

2006년에도 대내외 홍보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홍보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회원사, 사회단체, 학계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 등 다양한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제계의 의견을 노동계, 국민 및 정부 등에 이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홍보사업을 펼쳤다. 이와 함께 각종 특집 및 홍보 자료를 발간하여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위해 기업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우선 8월 16일 창립 45주년 기념일을 즈음하여 지난 40여년간의 한국경제와 전경련의 역사를 담은 『한국경제 45년, 전경련 45년』 화보집을 발간하였다. 이 화보집은 과거 물자와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던 50~60년대 시절, 가난을 떨쳐버리고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기업을 일으켰던 선대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되새기며, 오늘날의 기업인들이 앞에 놓인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힘과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간하였다. 화보집은 먼저 그동안 전경련을 이끌어 온 역대 회장 및 부회장단과 함께 현 회장단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전경련이 60년대 초 창립기에서부터 발전·성장기를 지나 오늘날의 성년으로 도약하기까지 민간 경제계를 대표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주춧돌이었다는 것과, 또한 그 한 가운데에서 일해왔던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 보았다. 또한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매 10년 단위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전경련이 역동적으로 펼쳤던 주요 사업들을 되돌아보았다. 한편, 동 화보집의 중요한 사진들을 통해 선대 기업인의 도전정신과 지난 45년간의 주요한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해 사진전시회도 개최하였다.

‘월간 전경련’은 2006년 7월 지령 500호를 맞이하였다. ‘월간 전경련’은 1962년 10월 창간 이래 기업경영 환경에 대한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월간 전경련’은 지난 45년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전경련의 활동을 기록하여 민간 경제계의 대표적인 기관지로서 위상을 구축해 왔다. 지령 500호를 계기로 2006년부터는 새로이 ‘오피니언 논단’을 편성하여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의 기고를 게재해왔다. ‘오피니언 논단’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전파하고 민간의 창의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영문 월간지인 FKI Newsletter의 발간을 통해 온라인 해외홍보활동도 추진하였다.

●●● e-Magazine을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출자총액제도 등의 입법동향들과 함께 각종 정책건의 내용과 회의·행사 개최 등 전경련의 사업활동을 홍보하였다.



8월에는 2005년도 한국경제의 동태와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집약한 총람으로 『한국경제연감 2006』을 발간하였다. 연감은 전년도의 거시경제 동향과 각 부문별 경제시책 등을 개관하고 국내 각 산업동향과 세계경제 동향을 분석·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경제통계 및 기업경영통계를 비롯하여 기업체요람, 해외주재 한국공관, 주한 금융기관, 종합상사 해외지점망 등 기타 최신의 산업자료를 함께 수록하여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연감의 별책부록으로 한국 주요 기업의 임원들의 현 직위, 과거 이력, 학력 등 주요 정보를 수록한 『한국재계 인사록』을 발간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CD-ROM 타이틀로도 제작하여 자료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켰다.

사이버 홍보매체인 FKI Briefs, FKI Opinion, FKI Issue Paper, VOB(The Voice of Business)등 e-MAGAZINE을 발행하였다. FKI Briefs는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국회와 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본회의 주요 사업활동을 알리는 e-Magazine이다. 2006년의 경우 총 40회 발행하였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출자총액제도 등의 입법동향들과 함께 각종 정책건의 내용과 회의·행사 개최 등 전경련의 사업활동을 홍보하였다. 또한 FKI Opinion은 국회의 원 및 보좌관, 각 정당 사무국, 국회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정부부처 등 입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200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증권거래법 등에 관한 경제계 의견을 대변하였다.

경제·정치·사회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장경제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하는 VOB는 2006년에 총 20회 발행하였다. 한미 FTA, 사회양극화, 적대적 M&A 방어에 대한 정책 방향, 상법개정 관련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적시에 경제계 의견을 편집하여 사이버상으로 각계각층의 독자들에게 홍보하였다.

Issue Paper는 경제와 산업동향에 대해 전경련의 조사분석과 평가 등을 홍보하는 온·오프라인 겸용 Magazine이다. 2006년에는 총 16회 발행하였으며 주요 산업별 동향, 600대 기업·투자동향, FTA관련 기업의견조사 등을 회원사 및 사이버 독자들에게 발송하였다.

\* The Voice of Business

	발행일	제 목
NO.71	1. 2	회장 신년사
NO.72	1.16	한미 FTA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NO.73	3.23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원인진단과 정책방향
NO.74	3.31	적대적 M&A 방어에 대한 입법·사법정책의 방향
NO.75	4.18	기업사회공헌의 의의와 과제
NO.76	5. 3	경제성과 불균형 현상의 원인과 대응방안
NO.77	5.19	FTA, 체계적·종합적 협상전략 수립·대응해야
NO.78	5.30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보완과제
NO.79	6.14	초·중등학교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중 경제 개정시안의 적정성 검토
NO.80	6.23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운영과 검토과제
NO.81	6.30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전략으로서의 파트너십
NO.82	7.13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NO.83	7.25	상법개정 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
NO.84	8.25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과제
NO.85	8.3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추진방향
NO.86	9.21	외국교과서들은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NO.87	10.24	학교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NO.88	10.31	청소년 경제교육의 방법 : 체험식 경제교육의 방향과 과제
NO.89	11.14	시민사회, 기업과 친해지기
NO.90	11.27	방송인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이 요구된다

\* FKI Issue Paper

	발행일	제 목
NO.47	1.23	2006년 산업별 동향 및 전망
NO.48	2. 6	600대 기업 시설투자 실적 및 계획
NO.49	2.16	최근 환율하락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결과
NO.50	3.10	해외 투기자본 유입증가에 따른 적대적 M&A 위협 및 대응방향
NO.51	3.21	2006년 주요 기업의 고용동향 및 채용계획 조사
NO.52	5.11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NO.53	5.24	기업의 산학협력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
NO.54	6. 1	2006년 주요 기업의 노사관계 사례와 시사점
NO.55	6. 5	해외 관광레저도시 개발사례의 시사점
NO.56	6.13	해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NO.57	7. 4	2006년 입단협 주요 쟁점과 과제
NO.58	7. 5	우리나라에 미치는 황사 영향 최소화 방안
NO.59	7.13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
NO.60	9.29	한미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NO.61	10.25	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NO.62	12. 6	한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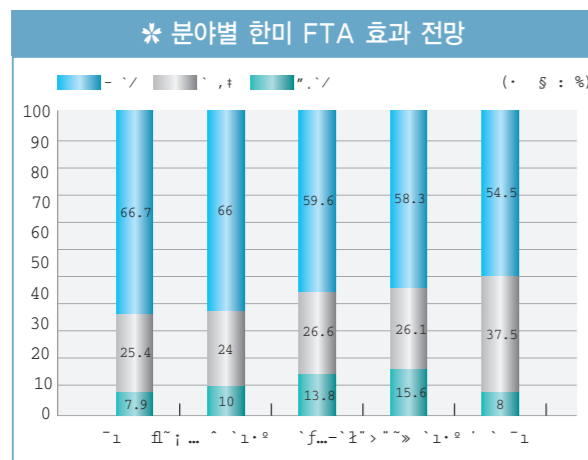
●●● 정부 협상단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업종단체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미 FTA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업계의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 10 FTA 추진에 따른 대책 강구

2006년 본회는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하여 정부의 FTA 협상에 산업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협상전략에 반영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본회 교육프로그램에 한미 FTA 과정 추가, 전화 컬러링 실시,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해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 ■ 한미 FTA에 대한 회원사 의견 수렴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 대응하여 한미 FTA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FTA를 추진할 최우선 대상국으로 미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투자유치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미 FTA가 투자유치 및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은 각각 66.7%, 66%로 나타났으며, 경제선진화, 소비자 후생증대, 미국내 투자유치 개선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해소되어야 할 미국 측 비관세장벽으로는 복잡한 통관절차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으며, 환경·물류 규제, 기술장벽, 위생검역조치, 투자·서비스 규제 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본회는 회원사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51개 대미협상과제를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5.26)하였으며, 대미 수출주력품목 조기관세 철폐,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개선, 섬유분야 원산지 규정완화 등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들이 협상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협상단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업종단체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미 FTA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다. 동 대책반에서는 정부간 협상을 전후하여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의 협상담당자를 초청,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의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국회 특위, 총리,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 외교통상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미 FTA 피해 예상업종 지원을 위한 수혜업종 역할론이 제기되었으나, 정책당국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반예산을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끌어냈다.

한미 FTA 협상 중 미국 측의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을 경쟁법상 반경쟁행위 규제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9.8)하고 협상과정에 본회 입장이 반영되도록 촉구하였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미국 측의 요구는 우리가 추진한 FTA 협상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양자간·다자간 협상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11월 말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상품분야의 개방 폭 확대와 무역구제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하였다. 특히, 지난 25년간 대미 수출액의 6.8%에 달하는 373억 달러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규제를 받는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양허를 통해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무역구제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시장접근 개선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한미 FTA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을 알렸으며,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사례 및 시사점」 등 한미 FTA 관련 시의성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미국 이외에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다른 국가와의 FTA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한·아세안 FTA 상품분야 협상에 자동차, 철강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1.25)하였으며, 7월에는 아세안시장의 서비스·투자 부문 기업애로과제를 조사하여 협상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과 함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시장 보고서(3.14)를 통해 한·인도 FTA 추진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인도의 서비스 및 투자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건의(7.12)하였다. 또한 한·EU FTA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8.14)를 통해 한·EU FTA 협상 개시 필요성을 밝혔으며, 산학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된 한중일 FTA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11월에는 한중 FTA에 대한 기업의 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 FTA 추진환경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강화

한편, FTA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본회는 FTA 체결이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확대되면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무역조정지원법을 조기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법률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4월 6일 무역조정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미 F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계를 비롯하여 일반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제단체 공동으로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지성명, 지지광고, 세미나개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및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고 기업과 농촌이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하는 1사1촌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2004년 6월 1사1촌 운동이 시작된 이래 1만 4,758건(11월말 기준)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기업체가 43.9%인 6,475건을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사1촌 운동의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마을 수해복구운동,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농촌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언론기고 등을 통해 농촌사랑운동에 대한 회원사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 11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 확산과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위해 주요 기업 CEO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실물전달식,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원 등 CEO가 참여하는 실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 사회공헌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공동으로 실천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업 및 기업재단의 2004~2005년의 사회공헌 실태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기업 및 기업재단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하여 「2005 사회공헌 백서」를 발간하였다. 사회공헌백서에서는 주요 기업 및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연혁, 제도, 프로그램 등을 있는 그대로 수록하여 사회공헌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발기업들에게는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현안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확산과 홍보에 주력하였다. 5월에는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관련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화 전략의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사회공헌' 세미나(5.18)를 개최하였다. 8월에는 「기업 사회봉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 각계에 알리고, 주요 기업들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후발기업들에게 제공하였다. 11월부터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 각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에게 사회공헌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e-Mail 뉴스레터를 격주로 발간하였다.

### ■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 강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윤리경영 선도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5개 업종(소비재 제조, 생산재 제조, 건설, 유통·서비스, 금융)별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라는 책자로 발간하였다. 특히, 업종별 윤리경영 매뉴얼은 국내 최초로 회원기업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회원사 윤리경영 담당자간에 실무작업을 통한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윤리경영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윤리경영 확산과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업윤리학교를 지방과 서울에서 총 3회 개최하였다. 3월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회원사 및 협력사들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윤리학교를 부산(3.23)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된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윤리학교는 현지 산업구조와 기업 특성에 맞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윤리경영 추진 사례가 발표되었다. 7월에 개최된 기업윤리학교(7.6)에서는 윤리경영 추진의 필요성, 국내기업과 외자계기업의 윤리경영 사례가 발표되어 국내기업과 외자계기업의 윤리경영 추진상의 차이점, 장·단점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1월의 기업윤리학교(11.30)에서는 향후 윤리경영 추진환경에 대한 전망, 기업전략으로서의 윤리경영, 단계별 추진전략과 사례가 발표되어 기업들에게 향후 윤리경영 추진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윤리경영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기업의 임원이 해외의 윤리경영 선도기업을 방문하여 윤리경영 현장을 체험하도록 주요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연수단을 5월 28일에서 6월 4일까지 유럽지역에 파견하였다. 주요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20명)들이 참석하여 유럽 선진기업의 윤리경영 현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상황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파견기간중 영국의 기업윤리 교육기관인 IBE를 방문하여 윤리경영 교육을 이수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세미나 개최, 현안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 활동실천의 실제적 지원에 주력하였다. 2월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여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ISO(국제표준화기구), UN 등 국제기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표준화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시민단체, 정부의 감시 및 규제 움직임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4월에는 「우리 기업의 윤리경영 추진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경영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8월에는 「유럽기업의 윤리경영 추진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 주요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보고서 등에 대한 동향 파악,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10월에는 지속가능경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국내외 동향과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회원사 및 주요 기업 임직원 240여명이 참석하였다.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Network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윤리위원회와 기업윤리임원협의회를 운영하여 CEO와 임원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과 베스트 프랙티스 전파사업을 추진했다. 3월 29일 제1차 기업윤리위원회에서는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순환 동부화재 사장을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들었다. 10월 24일 제2차 기업윤리위원회에서는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를 초청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듣는 등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단체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업윤리임원협의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9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윤리경영 담당임원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과 모범사례를 전파하였다.

●●● 2006년에는 노사관계 현안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건의, 정책간담회, 정부협의체 참여 등을 통한 의견개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12 선진 노사관계 여건 조성

2006년에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산업안전규제 등이 노사관계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안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건의, 정책간담회, 정부협의체 참여 등을 통한 의견개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 노사관계 현안 대응

회원사 입단협, 국가인권위 권고안,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먼저 1월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경제5단체 공동으로 발표하여 경제여건과 노사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은 권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인권위의 활동범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노사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3월 코오롱 노조의 불법행위, 6·7월 자동차산업의 입단협과 연계한 노사분규,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등과 관련한 실태파악과 조사연구자료 발간에 나서 언론에 홍보하거나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 철회를 촉구하는 등 우호적 여론조성에 앞장섰다.

2월 이후에는 노동부장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 경제5단체장 회의, 여야 정책간담회 등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정부원안대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비정규직법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월 27일 통과되었으나 국회내 여·야 정치상황, 민주노총의 입법관련 총파업 등으로 법사위에 계류되었다가 11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일부 후퇴된 내용이 있어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택한 차선책으로 간주되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차질없는 시행, 다수대

표제로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정리해고 사전협의기간 단축, 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등의 경제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4, 6, 9월 세 차례 개최한 노동복지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및 국회의 로드맵 관련 입장을 듣는 한편 경제계의 의견을 건의하였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사정대표자회의(9.11)에서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시행을 3년간 추가유예하고 정리해고 노조통보기간 단축 및 공익사업장 범위확대 등 15개항을 개정기로 합의를 본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월 8일에, 국회본회의에서는 12월 22일에 통과되었다.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시행을 3년간 유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된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문제 등 산업안전 관련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기업규제 완화에 진력하는 한편,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사업주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개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노동부, 산자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산업안전 관련회의에 참여하여 경제계 입장에서 실현 가능한 산업안전대책 수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인 ‘산업보건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을 발간하여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작성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산업재해 관련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2월)를 통해 기업경영상 비효율적, 비현실적 규제로 작용하는 산업재해 관련 제도(산재보험, 재해인정기준, 근골격질환 인정기준 등)에 대한 기업 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부에 근골격계 질환관련 법안의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한 이해관계에 놓인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노사정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 회원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대외위원회에 참여하여 경제계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이밖에 노사정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 회원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대외위원회에 참여하여 경제계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데 노력했다. 특히 범국가적 의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1월 26일 출범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의 논의주체로서 경제계가 한 축(민간공동의장 강신호 회장)으로 참가하여 5개월간 매주 2~3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탄생시킨 사회협약(6.20)의 체결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언론사의 캠페인 활동 지원, 조사연구 보고서를 통한 홍보 등의 제반 노력을 기울였다.

■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증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2006년 주요 기업의 고용동향 및 채용계획 조사」 보고서(3.21)는 고용증대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맞는 고용정책 및 경직적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주요 기업의 노사관계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5.3)는 주요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와 노사갈등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파악하였으며, 노사협력을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2006년 임단협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6.29)를 통해 노동계의 인사, 경영권 주장에 따른 피해사례를 알리고 노조의 경영참여 논의를 단체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것과 정치투쟁 지양 등을 주장하였다.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보고서(8.8)는 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현실과 불안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였다. 노조가 단기적 이익추구 및 인사·경영권 침해를 지양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고용안정의 선결과제임을 지적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6.5)는 복수노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수교섭대표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외허용 주장의 문제점」 보고서(11.30)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법 조항이 3년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만료 후에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없이 현행법대로 전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확대 방안」 보고서(6.28)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부가

가치 창출이나 고용기여 면에서 특별한 비교우위 업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흑자구조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산업으로서의 기틀을 갖추는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업·사회·정부의 효율적 분담방안의 필요성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관련 규제완화의 기반위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대응방향」 보고서(8.23)를 발간했다. 기업은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에 대비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무역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가정친화적으로 변경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근본문제가 '저부담·고급여'에서 파생된 만큼, 가입자 부담과 미래 노후소득의 적절한 조화가 개혁의 관건임을 지적하는 한편, 논란이 된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는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과악능력과 징수체계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한 「국민연금 쟁점과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11.17)를 발간했다. 국민연금 제도 밖의 사각지대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본회는 산하의 중소기업협력센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생협력 이론기반 구축 사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협의회 및 상생협력연구회를 구축·운영하고,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와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등 각 부문에서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클러스터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미나, 대기업 휴면특허 및 기술거래 매칭 세미나와 대·여성기업 상생협력 포럼, 대기업 중견인력 중소기업활용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포스코(서울), 현대중공업(울산) 경영노하우 설명회 및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세미나 개최,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 등 대·중소기업간 지식정보 및 경영노하우 공유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 ■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운영

대기업 CEO 및 임원의 경영노하우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 7월 발족한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2006년중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신청은 총 380개 업체, 자문건수는 1,091건에 달했다.

#### \* 자문실적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연간(누계)	연간(누계)
신청기업수	94	306(400)	380(780)
자문건수	211	886(1,097)	1,091(2,188)

또한 비상근고문 형태의 중·장기적 경영자문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개선을 위해 '06년 1월부터 멘토링 제도를 도입, 연중 총 39개사를 매칭하였다.

경영자문단은 찾아가는 경영자문 및 교육의 일환으로 국외지역(중국, 미국 등) 총 15인, 국내지역 총 26인의 자문위원이 참여한 지역 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자문상담회(서울, 대전, 광양, 제주 등)를 개최(총 7회, 226개사 자문)하여 해당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연계한 지속 경영자문에 힘썼다. 또한 중소기업 CEO 및 임원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기업 CEO의 경영지식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해 경영전략, 마케팅 등 16개 주제로 구성된 중소기업혁신스쿨(SIS, Small-business Innovation School)을 개발·운영하였다.

#### ■ 제3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 및 '상생경영' 서적 발간



12월 28일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2004년, 2005년에 이어 실시된 이번 협력대상 시상식은 경영혁신, 기술개발, 구매 및 판매협력, 인력교류(단체부문, 개인유공자 부문) 등 총 5개 부문에 대해 실시하였다. 포스코 최중태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 경남알미늄의 김원정 대표가 동탑산업훈장, KTF 정수성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삼성전기, SK주식회사, 신세계, 인지도스플레이가 단체부문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총 수상자는 단체부문 14개사와 개인유공자 11인이다.

전년에 이어 2006년에도 산업훈·포장과 대통령표창 수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시상하고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이 친수한 이날 청와대 상생협력성과보고회의에서는 본 센터 상생협력연구회의 연구결과물인 『상생경영』(상생협력연구회 지음, 김영사 펴냄)이라는 제하의 경영서적이 함께 보고되었다.

●●● '중국산업연구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환경과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 14 중국산업연구센터 운영

2006년에도 중국경제는 10.5%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함으로써 4년 연속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유지했다. 또한 2006년도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1조 7,500억 달러를 초과하여 2005년보다 24%가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액도 무려 1,70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2006년은 중국이 제1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첫 해로 중국정부가 '和諧社會(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사회 각 부문의 균형성장과 질적인 성장에 힘을 기울인 한 해였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저변의 확대로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2005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06년에도 20%가 넘는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폭은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전세계 교역대상국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국가였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한중 경제관계가 이처럼 긴밀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개척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의 제반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 국내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시장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시장개방에 적극적이었던 중국정부의 정책도 점차 자국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2004년 9월에 현지사무소 기능을 겸하여 북경 현지에 설립된 '중국산업연구센터'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환경과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 ■ 중국산업정보 발간

중국산업정보는 2004년 9월 22일에 제1호를 발간한 이래 2006년 말까지 총 78호를 발간하였다. 월 2~3회 발간되는 중국산업정보는 중국의 거시경제 및 산업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안 사항 및 시장 흐름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각 산업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와 관련 통계자료를 담고 있다.

2006년에 게재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부문에서는 연초에 <중국정부의 4가지 중점 정책방향>과 <9개 경제부처의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3월에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2006년도 입법계획을 분석하는 한편, 정부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과 대회에서 제기된 각종 핵심 안전에 대한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지난해 중국정부가 발표한 법령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규정>과 중국의 부동산 투자분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외자의 부동산시장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조치> 등 주요 정책변화를 해석하고 전망하였다. 또한 중국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산업구조 재편의 골간과 석유산업, 자동차산업 등 주요 산업의 장기발전전략도 분석하였다. 이밖에 <노동계약법>, <내외자기기업 소득세 통합법> 등 향후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등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부문에서는 2006년이 중국정부가 성장방식을 지금까지의 양적성장 추구에서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제11차 5개년 계획'의 시작년도임을 감안하여 각 지방정부와 산업별로 수립되고 있는 발전계획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독점산업의 경쟁현황 연구>, <중국의 물류 총원가 구조 연구> 등 중국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향후 15년간 중국의 산업추세 예측>, <2010년 중국의 2, 3차 산업 인재부족 실태 예측> 등에서는 중국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중국 가전제품 소매시장의 경쟁력 현황 조사>, <중국내 해외 프랜차이즈 체인 진출현황 조사>, <2006년도 중국의 전자결제산업 조사> 등 각종 실태조사 보고, 그리고 <상반기 제조업 운영 및 성장추세>, <상반기 상품시장 동향분석> 등 동향 보고도 폭넓게 다루었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물류, 운송, 에너지 등 우리 기업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관련 산업과 전자(반도체 포함), 가전, 석유화학(화공 포함) 등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거나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많은 산업을 많이 게재하였다. 또한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산업도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이밖에 부동산, 광고 등 비제조업 분야도 주요한 흐름을 그때 그때 정리하였다.



### ■ 각종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현재 중국은 국가 독과점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치열한 시장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외자가 선도하고 있던 산업에서도 중국 국내기업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 중국기업은 중국정부의 정책지원을 배경으로 특유의 가격경쟁력과 그동안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경쟁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효율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산업연구센터'에서는 중국의 산업을 약 60개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각 분기별로 주요 산업에 대해 동향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동향분석 자료에는 각 업종의 생산 및 판매동향, 수요공급 상황, 중국기업들의 경영실적, 관련 산업정책, 주요 기업들의 전략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조선, 가전, 의류, 주류제조, 광고, 증권, 보험, 부동산, 소프트웨어, 컴퓨터, 디지털가전 등 총 11개 업종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중국경제의 주요 현안이나 우리 기업들의 관심 사항을 다룬 이슈보고서도 발간되었다. 2005년에는 <중국 통신시장 3G 제조기업 경쟁력 분석>, <중국 전자정보 100대기업의 20년간 발전추세> 등이 발간되었다.

업종별 동향분석 보고서와 이슈 보고서 외에 중국시장 및 중국기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6년에는 2005년에 수행했던 연구과제 3건을 최종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최근 들어 중국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다음으로 전면 개방될 예정인 중국의 제품유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제품유 시장의 개방과 진출방안>에 대한 보고서도 발간하였다. 또한 중국 전역에 산재한 물류단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의 물류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물류단지의 운영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일종의 중국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총정리하여 산업별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자료집에는 가전, 건설, 건축재료, 관광, 기계, 도로운송, 방직, 보험, 부동산, 비철금속, 석유 및 천연가스, 석유화학, 석탄, 식품, 유통, 의약, 은행, 자동차, 전력, 제지, 타이어 등 22개 업종이 수록되었다.

### ■ 한중 경제계간 교류협력 지원업무

2006년 6월 27~28일에 서울에서 본회와 중국기업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3차 한중재계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본회 강신호 회장과 중국기업연합회 천진화(陳錦華) 회장 등 양국 경제인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중국산업연구센터는 본회의 북경 현지사무소로서 중국기업연합회와의 연락 업무 및 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3차 한중재계회의에 앞서 5월에는 2005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한중재계회의의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3성 투자환경조사단> 파견업무를 현지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10월 18~19일에 중국 길림성 長春市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12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제조업 포럼과 관련한 업무도 수행하였다. 동시에 본회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중국기업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화전국공상연합회 등과도 상시 연락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경제계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밖에 7월에는 북경에 소재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센터 사무실을 北京市 西城區 南禮士路 建威大廈에서 朝陽區 麥子店街 盛福大廈로 이전하였다.

●●● 본회는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과 아울러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기업계의 의견을 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 15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사 참여 제고

2006년중 본회는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회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정책개발기능 확충을 위해 사무국의 위원회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무국을 운영해 왔다. 일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활동이 부진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회원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관광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존 23개 위원회를 18개 위원회로 축소·개편하였다.

### ■ 위원회 중심의 사업 전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사 임원이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산하에 실무회의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사무국은 효율적인 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별 담당임원을 지정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위원회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지원체제를 사무국 내에 구축하였다.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분야에 대하여 전경련의 대표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필요시 위원회 개최결과를 위원회 명의로 언론 등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위원회에 정계, 관계, 학계 전문가 초청 등 위원회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회는 위원장단 회의를 신설하고 회장단 회의가 없는 달에는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장단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주요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본회 입장을 정립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위원장단 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장의 책임감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였다.

2006년중 본회는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과 아울러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기업계의 의견을 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본회는 위원회 중심의 사업전개를 통해 회원사의 본회 사업에 대한 참여율 확대(18개 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 참석률 평균 65%)에 기여하고 또한 정부·국회·회원사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채널구축에 기여하였다.

### ■ 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향후 위원회 중심의 사업전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별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원회 활동에 회원사 참여를 제고시켜야 할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2006년 위원회의 평균 참석률은 65% 정도로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참석인 아닌 위원(회원사 CEO)의 참석률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자간담회 개최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한편으로 회원사의 CEO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회에서는 위원장 및 회원사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사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 위원회별 주요 사업성과

위원회명	사업성과
경제정책위원회	-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 성장중심 경제정책 운용,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제도개선 건의
금융조세위원회	-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금융통합법 제정 건의 -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건의
기업정책위원회	-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제도개선 건의 - 상법개정과 관련 이종대표소송제도, 회사기회 유용 금지, 집행임원제도 등의 규제적 제도 도입 반대 건의
노동복지위원회	- 비정규직 보호입법안,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경제계 입장 건의
환경위원회	- 황사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간 공동협력 추진
자원대책위원회	- 자원개발 산학장학생 제도 도입 건의
산업디자인특별위원회	- 디자인기본법 제정 건의
문화산업특별위원회	-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도입 건의 - 천사관람제 발족
부품소재특별위원회	- 핵심 부품소재 기술로드맵 수립
교육발전특별위원회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건의
과학기술위원회	-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물류혁신특별위원회	- 물류정책기본법 제정 건의
관광산업특별위원회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 한일 민간관광협력회의 개최
사회협력위원회	-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 파악 및 대응사업 추진
사회공헌위원회	- CEO 봉사활동 및 저출산 대책 사업
기업윤리위원회	- 업종별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개발
대외협력위원회	- 한미 FTA 홍보사업 추진
국제기업위원회	- 개방화에 따른 산업계 애로사항 건의



## 16 회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회원서비스 제고

회원사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본회 주요 사업에 반영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사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 ■ 회원사의 의견수렴 및 참여제고에 노력



회장단 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하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해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무국의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였다. 회장단은 '친기업환경 조성', '출자총액제한제도', '환율안정', '국제유가', '한미 FTA', '수도권규제', 'SOC 투자'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무국은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회원사에 신속하게 피드백하였다.

또한 주요 그룹의 기획·재무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기업경영협의회 운영이 예년에 비해 활성화되었다. 매월 기업경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제정책운영 방향', '상법개정', '세제개편', '공정거래정책' 등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정부정책 추진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경제계의

#### \* 2006년 회장단회의 주요 논의내용

일 자	주요 내용
1. 12	위원회 재편, 2006년 사업계획대강과 예산(안)
2. 9	친기업 환경조성, 사회공헌활동 등 전경련 역할 검토
3. 18	한미 FTA, 출총제, 금산법 관련 대응책 및 과제
5. 18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과 과제, 상법개정안 재계이견 반영 노력
9. 14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상법개정, 노사관계 로드맵 등에 경제계 입장 건의
11. 23	'07년 경제운용에 대한 제언,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노력

의견을 정책 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입안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 2006년 기업경영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일 자	주요 내용
1. 26	'06년 경제정책 운용방향
3. 23	금융감독정책 방향
5. 3	공정거래정책과 기업의 과제
5. 26	국제금융시장동향과 기업의 과제
6. 21	상법개정 방향
9. 29	2006년 세제개편 방향
10. 20	정부의 노사정책 방향과 과제
11. 29	정부의 경제관련 정책방향
12. 19	'07년 경제전망 및 과제, 기업경영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식별·지역별·신규회원·친선골프 간담회 등 특성화된 간담회를 7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130여명의 회원사 CEO 및 주요 임원이 참석하여 총 34건의 경영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업에 피드백하는 등 대회원사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특히, 지역간담회는 회원사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되었다.

### ■ 對회원서비스 제고 노력

회원사의 경영애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회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On-line 회원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실질적인 對회원서비스를 하였다. 동 시스템을 통해 회원서비스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또한 회원사에 대한 이해 제고와 회원에 대한 밀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사 간부 초청 간담회', '회원사 간부 초청 국내의 산업시찰', '연말정산 및 개정세법 설명회' 등의 서비스를 실시했다.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이나 회원의 각종 애·경사에 대한 경조조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등 회원서비스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 전경련 사업보고서 2006

---

**인 쇄** 2007년 1월 26일  
**발 행** 2007년 1월 31일  
**발 행 인** 강신호  
**편 집 인** 조건호  
**발 행 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작대행** (주)FK미디어  
**출력·인쇄** 보리문화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 화** 02-3771-0114  
[www.fki.or.kr](http://www.fki.or.kr) | 비매품